

경총, 노동유연성 제고·노사관계 선진화 등 숙원 전달

이재명 “자칫, 노동환경 후퇴할 수도… 합리적 영역 찾아야”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만나 노동유연성 제고, 노사관계 선진화, 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경영 안전성 제고 등 기업의 숙원 사항을 청취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총의 건의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영역을 찾아서 타협하는데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경총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오늘날 우리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저출생과 고령화는 물론 트럼프 당선에 따른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헤쳐나가야 할 많은 난제에 직면했다”며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 같은 첨단 분야에선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서 우리 주력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AI(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와 산업 구조의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노동시장의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정리했다.

손 회장은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만나 간담회를 하기 전 경영계 건의사항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의 선택권 보장 및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반대 ▲상속세 일괄공제 확대 및 국가 전략 기술 투자세액 공제 일몰 연장 ▲첨단 산업 직접 보조금 투자 ▲이사 충실 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반대 등을 건의했다.

이 대표는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경총의 건의사항만 듣고 일방적으로 입법이나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경총에 오면 주로 노동 유연성 확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한다.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쪽에 속하는 것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면서도 어쩌면 수치스러운 일일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하나 예를 들면 엄청난 비용의 산재사망률, 산재사고율 이런 것도 국가적 수치일수도 있다”며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비중이 크진 않겠지만,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도 어차피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노동시간에 관한 문제도, 기업이 노동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임금은 최소한으로 지급하는 것이 단기

적으로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길게 보면, 고용 불안을 겪는 노동자들이 과연 기업에 소속감을 갖고 정말 최선을 다할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게 내 회사다. 내가 일한 성과가 크면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과, ‘시간만 때우면 된다. 어차피 나는 언제 내쫓길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비교하면 과연 어느 쪽이 나올까”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런데 이 양자를 조화시킬 필요는 있다. 정말로 꼭 필요한 영역들, 예를 들면 ‘집중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

한 영역들은 노동시간을 통제해놓으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것은 노동자들 자신에게도 불리하다’라는 주장도 있다”라며 “만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계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전체 제도를 통째로 바꿔버리면 이 제도가 잘못 사용돼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전체적으로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실 그런 주장은 해도 관철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서로 섬섬하고 기본만 나쁘다. 실현 가능한, 정말 꼭 필요한, 합리적인 개선을 해내는 것, 그걸 누가 반대하겠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경총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한 우려가 있었다. 이 대표는 실제로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기업가치도 제고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라며 “그 문제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기업의 배임죄 적용이라든지, 배당 소득 문제라든지 주주 가치 제고와 관련한 여러 조치를 통합적,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3분기 韓 GDP 0.1% 성장… OECD 16개국 중 11위

당초 시장예측치 0.5% 크게 빗나가 2분기 ‘역성장’ 회의적 시각 반영된 듯 올해 성장전망치 2.4% 달성 어려울 것

우리나라는 올해 2분기에 이어 3분기 경제성장률 국제 비교에서도 하위권에 밀려있어 자리잡는 모습이다. 3분기 수치는 각국 집계가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중간 취합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6곳 중 11위에 처져 있다.

10일 OECD 집계에 따르면 한국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가 직전분기 대비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총 38개 회원국 가운데 수치를 발표한 곳은 16곳이다. 이 중 한국은 이날 기준 공동 11위로 내려앉았다. 성장률이 우리보

다 낮은 회원국은 현재 4곳뿐이다.

한국은 미국(+0.7%), 스페인(+0.8%), 멕시코(+1.3%) 등에 크게 뒤졌다. 이 밖에 리투아니아(+1.1%)와 코스타리카(+0.6%), 프랑스(+0.4%), 오스트리아(+0.3%), 체코(+0.3%), 독일(+0.2%), 포르투갈(+0.2%)에 비해서도 낮았다.

OECD가 평균 낸 유럽연합(EU)과 유로존 국가 수치도 각각 +0.3%, +0.4%로 한국에 앞서 있다. OECD 평균치에 또 못 미칠 전망이다.

3분기 한국 성장률(+0.1%)은 당초 시장의 예측치(+0.5%)를 크게 빗나갔다. 이에 따라 일부 국제기구 및 투자은행(IB) 등이 우리나라의 2024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제기된

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등 8개 IB의 한국 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지난 9월 말 기준 2.5%에서 10월 말 2.3%로 0.2%포인트(p) 내려왔다. 앞서 지난 6월 말 평균 예측치는 2.7%에 달한 바 있다.

이 같은 IB발 하향조정의 배경에는 3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성장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반영돼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분기 GDP가 직전분기와 비교해 0.2% 쪼그라들었다. 역성장했고 OECD 회원국 38곳 중 공동 31위에 이름을 올렸다. 3개국이 -0.2% 동률을 보이면서 한국 뒤는 불과 5개국밖에 없었다.

이제 4~6월 -0.2%, 7~9월 +0.1%라는 초라한 성적을 안고 4분기 연말 특

수에 기대를 걸어야 할 상황이 됐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4%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지난달 24일 ‘2024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설명회에서 “2분기 -0.2%에서 3분기 증가 전환했지만 0.1% 성장률은 양호한 수준이라 평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국장은 “산술적으로 4분기에 1.2% 정도 성장하면 연간 성장률 2.4%가 나온다. (그러나) 3분기 전망치에 비해 실적치가 낮게 나와 2.4%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가지 대내외 불확실한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다음 달 전망 때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내수회복 지연 영향 소매판매 10분기째 ↓

통계청, 3분기 지역경제 동향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전국 소매 판매가 10개 분기 연속으로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의 경우도, 15개 분기째 증가를 보였으나 증가 폭은 14개 분기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은 전국은 운수·창고, 금융·보험 등의 생산이 늘어 1년 전 같은 분기에 비해 1.0% 증가했다. 15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으나 상승폭은 2021년 1분기(0.7%) 이후 14개 분기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경남(-3.6%), 세종(-3.4%), 전북(-3.0%)은 부동산, 예술·스포츠·여가 등의 생산이 줄어 감소했다. 반면, 제주(9.0%), 인천(3.8%), 광주(1.1%)는 정보통신, 예술·스포츠·여가 등의 생산이 늘어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전문소매점, 슈퍼마켓·잡화점 등의 판매가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1.9% 감소했다. 지난 분기(-2.9%) 대비 감소폭은 줄었으나 10개 분기 연속 줄어 들었다. 충남(3.9%), 충북(1.2%), 부산(0.9%)은 전문소매점, 승용차·연료소매점 등의 판매가 늘어 증가했으나 인천(-4.4%), 강원(-4.1%), 서울(-4.0%)은 승용차·연료소매점,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 등의 판매가 줄어 감소했다.

전국 광공업생산은 반도체·전자부품, 의약품 등의 생산이 늘어 전년 대비 2.5% 증가했지만 2023년 3분기(-0.4%) 이후 4분기 만에 최저 수준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2분기 가계대출잔액 1892조 ‘역대최대’

》1면 ‘韓 경제의 뒷’서 계속

물가가 상승한 만큼 소득이 오르지 못하면서 가계가 저축을 줄였다는 분석이다.

이자비용이 늘어난 것도 저축여력을 끌어내렸다. 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이자비용은 전년 대비 31.7% 급증했다. 코로나19 기간 가계부채가 늘어난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계가 짊어진 빚의 규모

를 의미하는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1886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조8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분기말 잔액은 1896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생계유지 위해…고금리 2금융권 대출 문제는 가계 순저축률 감소는 생계유지를 위해 또 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39조5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3조9000억원 늘었다.

특히 은행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로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문턱도 높이고 있다. 기타대출 잔액은 238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1~10월 기타대출은 5조2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으로 대출받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8월 5000억원 증가한 것을 제외하곤 모두 전월

대비 감소했지만 지난 10월 한달 새 2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이자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생활 자금 마련을 위해 2금융권에 돈을 빌리는 수요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풍선효과로 더 늘어났다”며 “다만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너무 높이면 은행에서 대출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나 저소득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어 은행처럼 대출 규제를 강화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